

# 줄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산업현장 달라진 게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4년…광주·전남 산업현장 보니

4년간 광주 32명·전남 105명 사망…감소 흐름 없고 전남은 되레 증가  
검찰 송치 9.2%에 대부분 집유 선고…기대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 여전  
노동계 “양형기준 제대로 만들고 기업 책임 체감할 법 개정안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년 1월 27일)된지 4년이 지났지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오히려 재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 시행 이후 2000건이 넘는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단 0.2%만이 실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는 등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이 엄정하게 적용되지 않으니 발주처부터 현장 관계자까지 경각심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광주·전남의 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137명(광주 32명, 전남 1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남 지역 중대재해 조사 대상(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사망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 지역 사망자는 2022년 36명(사고 건수 33건), 2023년 33명(32건), 2024년 38명(37건)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36명(33건)에 달했다.

광주의 사망자는 2022년 12명(7건), 2023년 8명(8명), 2024년 4명(4건)으로 줄어든다, 2025년 들어 3분기까지 8명(8건)으로 뛰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2022년 644명(611건), 2023년 598명(584건), 2024년 589명(553건), 지난해 3분기까지 457명(440건)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증가세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25년 3분기까지 275명(2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명(10.4%) 늘어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82명(170건)으로 12명(6.2%) 줄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의 절반 이상인 137명(134건)이 숨지면서 초소규모·영세사업장 내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법 취지와 달리,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입법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7월까지 확인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건수는 2986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절반도 안 되는 1252건(41.9%)만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를 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은 276건(9.2%)에 불과하다.

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21건(4.0%)에 그쳤으며, 유죄 판결은 49건(1.6%)뿐이었다. 그나마도 42건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7명(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 벌금은 대부분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중대재해를 막겠다며 법을 만들어 놓고 기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도 약해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광주에서도 최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두 달 가까이 시공사 관계자 3명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발주처인 광주시 관계자는 입건조차 안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 책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욱 민주노동 광주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산업재해와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벼웠기 때문”이라며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기업이 책임을 체감할 경제적 제재안, 과징금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도교육감 후보 ‘팬클럽’ 내걸고 사전선거운동 5명 수사

전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팬클럽’ 이름을 내걸고 사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 등이 지난해 11월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결성한 뒤, 출범식을

개최하고 미성년자 등에게 B씨를 지지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이 팬클럽 명의로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B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도 벌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경찰청은 A씨 등을 상대로 사조직 운영 경위와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내용, 후보자와의 연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5·18 때 모습으로  
상무관 간판 복원

1980년 5월의 아픔을 간직한 광주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27일 오전 관계자들이 상무관 입구에서 5·18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도서관 붕괴 8명 추가 입건…총 30명

합동감식 결과 2월말 예상에 수사 결과도 상당 시간 걸릴 듯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사 관계자를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오는 2월 말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의 핵심 중 하나인 ‘사고 원인’조차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한 인원 수는 이날 기준

3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15일까지 신재욱 광주시 종합건설 본부장을 비롯한 광주시 소속 공무원 4명과 공사 관계자 등 22명을 등을 입건한 데 이어, 최근 하청 업체 직원 등 8명을 추가 입건했다.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7차례 이뤄졌으며, 휴대전화 및 관련 서류 1900점, 전자정보 10만여점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용접 문제, 콘크리트 균열 등 부실 타설 문제, 특기시방서 미반영 문제 등 기존 제기된 문제점들 대부분이 타당성 있다

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주시와 시공사가 ‘무리한 속도전’을 벌였다는 정황(광주일보 2025년 12월 18일 6면)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붕괴 사고 직전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는 동시에 지하층에서 전기 공사를 해 여러 공정을 동시에 한 점 등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또 경찰은 감리단 등이 공사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정황, 불법재하도급, 무자격자 시공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 결과는 2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로도 행정 처리, 추가 조사를 이어가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제주항공 참사 수사 1년 넘게 지연에

경찰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 편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지연되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당초 수사를 전담해 온 전남경찰청이 1년 넘게 한 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는 등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자 국수본 차원에서 수사단을 새로 꾸리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9일부터 전남경

찰청 내 제주항공 참사 수사본부를 박성주 국수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사단장은 정성학 경남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으며, 팀장은 총경급 2명이 맡는다.

수사단에는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를 비롯해 서울·인천·경기북부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기해법죄수

사팀·디지털포렌식센터 등 48명이 투입될 예정이 다.

국수본은 “국정조사에서 지체된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우려와 사고 현장 수사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관련 기관·업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인근에 차려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특수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정 수준에서 수사를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